

오피니언

光日春秋

강준만



5·31 지방선거 결과는 한가지 진부한 교훈을 새삼 확인해 주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바늘 허리에 실 때여 쓸 수는 없다

5·31 지방선거는 사실상 지난 2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선거음 개각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어 선거를 겨냥한 선심 행정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정부가 선거의 뜻을 선의로 해석하자면, 이번 기회에 지역구도를 타파해 보겠다는 열망이 앞섰을 것이다. 특히 영남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없다는 건 이미 김대중 정권의 이른바 '동진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는가.

주세요. 돈 없어 죽겠소? 돈 내러보낼테니 찍어 주세요.

그런 수법으로 지역구도는 극복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행정

'지역구도 극복'은 정공법으로

그렇게 전략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건 오히려 지역 차원에서 "빠앗긴 정권 되찾자"는 욕구만 자극할 뿐이다.

상호 오해가 난무해서 그렇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지역구도를 지지하거나 환영하는 사람은 없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전제는 진실성과 성실성이다. 정권의 공정성부터 확보하는 게 생명이다. 선거판에서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야 지역발전이 된다"는 구호를 외치는 게 상식으로 통용되는 한, 그리고 그런 '상식'을 정권이 양장서서

유포하는 한, 지역구도는 극복될 수 없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은 정반대되는 두가지 일을 동시에 했다. 정권의 공정성을 제도화하고 시스템으로 작동하게끔 공을 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훼손하면서 정치구호로만 '지역구도 타파'를 외쳐댔다.

우리 인간은 묘한 동물이다. 불량이 있는 사람의 거짓말엔 별로 화내지 않지만,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엔 불같이 분노한다. 전자의 거짓말이 후자의 거짓말에 비해 훨씬 악성이

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신이 속았다는 점이다. 이게 바로 민심이 노 정권으로부터 떠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

지역구도 극복의 출발점은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야 지역발전이 된다"는 선거 구호를 지역주의 선동으로 간주하는 의식 개혁이다. 그리고 그 의식개혁을 뒷받침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각 지역에 대한 국가 정책 집행이 연고와 인맥 중심의 로비에 의해 결정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각 지역의 낙후 정도와 각 지역에서 만든 발전전략의 내실과 창의성을 엄

정 평가하여 지원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하게끔 유도한다면, 누가 감히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야 지역발전이 된다"고 말할 것이며, 또 어떤 유권자가 "우리 지역 출신 정권 만들어야 지역발전 된다"고 믿겠는가.

노정권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수많은 위원회를 양산했으면서도 왜 그런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위원회는 만들지 않은 것일까? 지역구도 타파를 가장 큰 목표로 내세운 정권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진실성과 성실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은 아닐까?

한국인들은 진실성과 성실성이 결여된 사람이나 세력을 좋아하지 않는다. 역량은 없으면서 말로만 큰소리 치는 사람이나 세력도 좋아하지 않는다. 게다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명분만 휘두르면서 독선과 오만까지 범한다면, 그건 첫 번째 응징 대상이다.

대다수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닌 하는 건 두 번째 문제다. 지역구도 극복은 진실성과 성실성에 기반한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변칙적인 방법보다는 정공법이 훨씬 더 빠르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한국인 납치·역류 정부는 왜 이리 무능한가

한국인 근로자 5명이 나이지리아에서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한국대사관이 소재 파악과 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납치 무장단체의 정체가 구체적인 요구사항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외국민 보호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의 하나다. 그러나 해외 교민 피랍이나 실종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기 그지 없다.

지난 4월4일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서 참치잡이로 나섰다 피랍된 동원수산 소속 제628 동원호가 대표적 사례다. 피랍된 참치 두달이 넘었으나 무사귀환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구체적인 협상투트조차 찾지 못한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피랍 선원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

이번 피랍사건도 정부가 현지의 극심한 치안불안상황을 감안해 사전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반면 지난 1977년 니카타에서 납치됐

던 요코다 메구미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은 우리와 너무 대조적이다. 일본정부는 요코다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포기하기는 커녕 총리이하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모두 나서 한국인 납북자 김영남씨 가족들의 체포포를 제공받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우리로선 상상하기 힘든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04년 이라크에서의 김신일씨 피살이후 정부는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공수포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 재외국민보호를 맡고 있는 영사관이 270여명에 불과해 인력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재외국민들이 피랍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들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려면 무엇보다 국가가 재외국민을 귀하게 여기고 보살피려 한다.

경제 풀러야 저출산·고령화 대책 효과본다

어제 발표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최고속 수준의 인구고령화에 대비하려는 정부의 안간힘이 느껴지는 종합적 내용이다.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년 연장을 추진토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나 크게 새로운 것은 없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방치했다간 재앙이 초래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대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과연 이런 조치를 믿고 젊은 부부가 출산을 결심하고, 퇴직 고령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출산 촉진 대책들은 다양한 하지만 프랑스나 일본에 비해 강력하거나 파격적인 내용이 없고, 고령화 대책들은 기업이 협조하지 않고선 구호에 그칠 우려가 높다.

우리는 일찍이 저출산 문제는 교육문

제와 육아부담 문제가 해결의 관건이요 고령화 문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광범한 직업 재교육이 필수적임을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알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육아시설을 확충하거나 출산·육아 휴직제 등을 확대하는데도 정부와 기업의 공동부담이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나 직업 재교육도 기업과 국가가 그 비용을 나눠 맡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두 문제 모두 경제가 뒷받침 해주지 않고서는 해결난망의 난제인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투자에 비해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대표적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기 후반기나 종말대책을 꾸려나가는 모습은 가사하다. 이같은 정책들이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업의 투자유치를 북돋는 원초적 처방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無等鼓

지난해 7월 충북의 한 자치단체는 초대형 가마솥을 제작해 이목을 끌었다. 둘레 17.85m, 지름 5.68m, 높이 1.68m, 두께 7cm인 이 가마솥은 애초 군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술밥을 먹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솥이 너무 커서 밥이 제대로 익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2m에 가까운 솥에서 밥을 푸는 일이 쉽지 않아 밥짓기 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그러자 이 자치단체는 지난해 고추축제 때 이 솥으로 옥수수 2만 개를 한꺼번에 삶아 주민과 관광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벌였다. 지난 3일

에는 단오절을 맞아 가마솥에 물 2만5천ℓ와 찰포 125kg을 넣고 무려 12시간이나 끓이는 '가마솥 찰포물 머리감기' 행사를 가졌다. 결국, 이 자치단체는 1년간 2번 행사를 위해, 그것도 애초 용도로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5억원(가마솥 제작비)이라는 협세를 쏟아부었다.

5년여 동안 지자체의 예산낭비 실태를 고발해 온 '함께하는 시민행동'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최근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전시행정에 지방정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동체 의식을 높이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수많은 축제나 행사 가운데 주민화합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축제는 과연 얼마나 될까. 민선 자치단체장 시

대도 10년이 넘었다. 이제 시황착오는 그만 하면 됐다. 다음 달 새봄에 출범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시를 축제나 행사부터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협세나 낭비한 전시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된다.

/정재현 사회2부장 jhjung@kwangju.co.kr



전시행정

기고

이승철



최근 아토피 피부염이 급증,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어릴적부터 어린이의 15~20% 정도가 이 질환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어서 국가적인 이슈가 될 정도다.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원인으로 유전적인 소인이 가장 중요하며 환경적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병을 일으킨다는 것이 정설이다.

후 아토피 피부염이 증가하였으므로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바로 스테로이드라는 희한한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또 "병원에서의 약물 치료가 환자 자신의 저항력을 약화시켜 아토피 피부염이 고질병으로 변한다"는 주장에 동조

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환자의 고통에 동참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리라 본다.

아토피 피부염의 환자를 둔 부모들은 도처에 널려 있는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들 정보 가운데는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정보도 많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환자를 현혹하는 정보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다.

"부모님들이 반의사가 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의 뜻은 아토피 피부염이란 환자마다 원인·증상·치료 및 예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내는 "맞춤 치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님께

하는 일부 부모들은 절대로 병원에 가지 않으리라고 전의를 불태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른바 독을 빼낸다는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너무 심해져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이것은 독이 빠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증상이 약화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의사는 환자보다 더 큰 자괴감에 빠진 한다.

아토피 피부염은 아직까지도 완치시키는 치료법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호전되는 질환이다.

따라서 한 번의 치료를 완치를 시키는 것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진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이며 아토피 피부염의 정복을 위해서는 더욱이 환자의 신뢰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 입장에서 한 어린이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할 때 그 부모와 가족

료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토피 피부염을 완치시키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고 조절하면 낫는다는 광범한 진리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전남대 병원에서도 초등학교 중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토피 피부염 학교를 개설, 올해로 3년째다. 1박 2일의 일정 동안 의사와 숙박을 같이하면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레크리에이션의 시간을 갖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캠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100 미터를 뛰어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42.195km를 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묵묵히 달려가는 마라톤이라는 느긋함을 가질 때 아토피 피부염으로부터 해방되리라 본다.

<전남대 병원 피부과 과장>

기고

박삼종



요즘 방송을 통해 접하는 주요 뉴스나 신문의 지면을 장식하며 우리 국민의 관심을 갖게 하는 사건, 또는 시사문제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것들이 앞자리를 차지할까?

아무래도 첫번째는 2006년 독일 월드컵 축구에 관한 우리나라의 16강 진입 기대감과 더불어 축재 분위기를 껴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새로 일기가 시작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각종 정치·사회문제가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 출산율이 급감해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거나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비정규직 철폐와 임금인상 등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투쟁모습 등 각종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고향인 농촌이 너무나 큰 몸살을 앓고 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이은 FTA,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문화해택은 고사하고 옛부터 존재하던 시설물조차 낡고 파헤쳐지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고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고향인 농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시간을 낼 수만 있다면 농촌을 자주 찾아야 한다. 농촌을 찾아가면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 아니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둘째, 농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주 찾지는 못하지만 부모님의 소식, 친

농촌은 영원한 우리의 고향

사건사고를 다룬 사회문제가 다음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절대인구 점유비율마저 줄고 젊은이의 무관심과 더불어 고령화된 인력구조를 가진 우리 농촌의 이야기는 아예 언론의 주요 이슈가 돼지 못하고 있어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농촌은 아무리 숨기고 축소하려고 해도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고 반드시 돌아야만 하는 근원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

현대를 바쁘게 살다보면 여러가지를 망각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우리 후손들이 미려를 바라보는 해안을 갖고 후손들이 잊지 않고 고향을 찾도록 숲, 추석과 같은 명절을 만들지는 않았을까?

구들 소식 등 고향소식에 귀 기울이면 꼭 찾아가지 않더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너무 많다.

셋째,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회원으로 가입하는 일도 농촌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봉사활동은 물론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라면 지금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무리 부자라도 남에게 베풀 마음이 없으면 항상 배고픔에 허덕이지만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그만 정성을 베풀다면 이를 진정 큰 부자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신운본부부장>

초등생 남자아이 여탕 출입 자제했으면

최근 중학생인 딸과 함께 인근 대중목욕탕에 갔는데, 여탕에서 남자 아이 3~4명이 물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다.

남자 아이들 나이는 대부분 5~7세로, 아이들 중에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도 있었다.

7살 정도의 남자 아이를 여탕에 데리고 오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

목욕탕을 찾은 여성들에게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는 하지만 절대 기본 좋은 일은 아

니다. 또 남자 아이들이도 교육상 좋을 것 같지 않다.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 딸아이는 남자 아이들을 보고는 목욕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나가자고 독촉했다.

5세 이상의 남자 아이는 여탕에 데리고 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윤지·여수시 안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보도블록 교체 공사 책임감 갖고 마무리 잘해야

최근 보도블록을 시공할 때 배수 시설을 잘못하는 바람에 도로가 움푹 꺼지거나 물이 고이는 곳이 많다. 비 오는 날 고인 물 때문에 옷에 물이 튀는 일을 당한 시민들도 많을 것이다.

모래 위에 얹는 돌이나 블록은 이음매를 잘 맞춰야 한다. 특히 시멘트로 부착하는 경우나 유색 아스팔트 콘크리트도 포장하는 경우에는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가스관을 매설하거나 통신케이블 공사를 한 뒤 이를 복구할 때에는 향후 꺼지는 경우도 예상, 더 잘 다지거나 골라서 마무리해야 한다.

매년 도로 보수 공사를 하고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10m 공사를 하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 ▲김세준·광주시 남구 도곡동